

현안과 과제

■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목 차

■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1. 개요	1
2.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	2
3.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동북아연구실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외 3명 (2072-6225, hzz72@hri.co.kr)

1. 개요

- 한·미 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정치·외교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한반도 내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한·미·일 對 북·중·러 新 냉전구도 가속화 우려
 - 사드란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의미, 비행 최종 단계에 돌입한 적의 미사일을 40~150km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
 -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로 이해하고 있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으로 인한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상황임
 - 더욱이, 우리와 경제적 교류가 많은 중국이 우리에게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등 향후 양국 간 경제 교류 정체가 우려됨
 - 최근 위생 및 검역(SPS) 강화 등 비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한류, 중국 현지 국내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확산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따른 주변국의 정치·외교적 입장을 살펴보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진단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함

< 사드배치 일정 및 중국의 보복 사례 >

주요국	사드배치 일자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
2016	1. 6	- 北, 4차 핵실험 실시
	2. 7	-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 발표
	2.17	- 中 외교부,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 요구
	7.13	- 한미, 사드배치 결정 공식 발표
2017	2.27	-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 제공 안건 의결 - 1월: 인천·제주·부산행 크루즈 선 운항 취소 - 3월: 중국내 롯데마트 23곳 영업정지

자료 : 각종 언론보도 참고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2.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

가. 정치·외교적 이슈 : 북·중·러 공조 강화 예상

○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로 이해하여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에 동조하는 양상

- 미국 : 2002년부터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적극 추진

- 2002년 ABM 조약(Anti Ballistic Missile, 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1972년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 조약)에서 탈퇴, 미사일방어청(Missile Defense Agency)을 설치
- 유럽, 중동 및 아태 지역에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
- 2006년 일본에 X 밴드 레이더 기지를 설치, MD형 구축함(이지스함)을 배치
- 2014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내 사드 도입 필요성 제기
- 향후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사드 추가 배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

- 중국 :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을 동아시아 전략적 균형의 훼손으로 인식

- 중국은 2014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
- 사드 배치 결정을 한국이 미국 MD 체제에 편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이 미국의 對중국 포위·견제 전략에 편승한 것으로 인식
- 또한, 사드 레이더 시스템(AN/TPY-2)의 탐지 활동으로 지린(吉林)성·산둥(山東)성 등에 배치된 동풍(東風·DF) 계열 중거리미사일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
- 향후 러시아 등 우방국들과의 상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MD 체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對 한국 무역 보복 조치 우려가 있음

- 러시아 :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며, 중국과 공조가 가능하다는 입장

- 미국의 MD 체제 강화로 역내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
- 미사일 부대의 재배치를 검토하되 미사일 타격 반경을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역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향후 중국과 군사·외교적 차원의 공조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임

- **일본 : 미일동맹 강화 및 對중국 견제 차원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지지**
 - 일본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를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기대
 -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자 항시 요격 체제를 취할 수 있는 사드 도입 논의가 가속화
 - ※ 일본은 2006년 아오모리(靑森)현 쓰가루시에, 2014년에는 교토(京都) 고탄고시에 요격미사일을 제외한 사드의 핵심인 미사일 방어용 조기 경보 레이더 'X 밴드 레이더'를 배치한 바 있음

- **북한 :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기조에 맞춰 대응하면서 한·미·일 對 북·중·러 대결 구도 강화를 유도**
 - 북한은 사드 배치가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기조에 맞춰 대응하려는 입장
 - 사드 배치를 계기로 북·중 및 북·러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이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한·미·일 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대남 공세를 통해 사드 배치 관련 남남갈등을 조장하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주요국 입장과 대응 >

주요국	주요 입장과 대응	
미국	입장	- 2002년부터 MD 체제 적극 추진 · 2014년부터 한반도 내 사드배치 필요성 제기
	대응	- 향후 조속한 사드 배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중국	입장	-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전략적 균형의 훼손으로 인식 · 한국이 미국 MD 체제 편입 및 미국의 對중국 포위·견제 전략에 편승한 것으로 인식
	대응	- 러시아 등 우방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예상
러시아	입장	- 사드 배치로 역내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
	대응	- 향후 중국과 군사·외교적 공조 강화
일본	입장	- 미·일 동맹 강화 및 對중국 견제 차원에서 사드 배치 지지
	대응	- 사드 일본 배치 논의 가속화
북한	입장	-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기조에 맞춘 입장 표명
	대응	- 한·미·일 對 북·중·러 대결 구도 강화를 유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참고 1】 사드 배치 결정 주요 일지

-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前 한미연합사령관)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 필요성 제기한 이후 2년 1개월(2016.7.13) 만에 확정

< 사드 배치 주요 일지 >

일시		주요내용
2014	6.3	- 커티스 스캐퍼로티, KIDA 강연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 언급
	6.5	- 美 국방부 "한국 정부, 사드 관련 정보 요청했다" 언급
2015	2.4	- 창완취안(常萬全) 中 국방부장, 한중 국방장관회담서 사드 우려 표명
	3.9	- 국방부 "사드 구매 계획 없고, 독자 방어체계 구축" 언급
	3.11	- 청와대, 사드 관련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 재확인
	3.26	- 北 외무성 "사드는 선제공격용" 비난
	4.10	- 애슈턴 카터 美 국방장관, "사드 배치 논의 단계 아니다" 언급
	4.17	- 美 태평양사령관, "한반도에 사드 포대 배치 논의 중" 언급
	5.21	- 국방부 "미국이 요청하면 사드 배치 협의할 것" 언급
2016	10.30	- 美 록히드 마틴 "한미 사드 배치 공식·비공식 논의 중"
	1.6	- 北, 4차 핵실험 실시
	1.13	- 박 대통령,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안보·국익 따라 사드 배치 검토" 언급
	1.31	- 美 태평양사령관 "사드 배치, 한미동맹이 결정할 사항" 언급
	2.7	- 한미,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 발표
	2.9	- 러시아,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 표명
	2.11	- 왕이(王毅) 中 외교부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사드 배치 불만 표출
	2.17	- 中 외교부,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 요구
	2.22	- 국방부 "공동실무단 구성·운영 협의 진행 중" 발표
	2.23	- 추귀홍(邱國洪) 주중대사, "사드 배치 한중관계 파괴" 발언
	2.24	- 존 케리 美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시 사드 필요 없다" 발언
	3.2	-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발언
	3.4	- 사드 배치 논의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및 공식 출범
	3.11	- 중국·러시아 외무장관 "사드 한반도 배치, 중·러 안전 위협"
	3.31	- 시진핑(習近平) 中 국가주석, 미중 정상회담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6.5	- 쑨젠궈 중국군 부총참모장 아시아안보회의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6.7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한반도 사드 배치 지지"
	6.28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법사위에서 "한미 사드 협상, 올해 안에 결론"
	7.8	- 한미, 사드배치 결정 공식 발표
	7.11	- 北 외무성 대변인, "사드 배치, 주변국 직접 겨냥한 것 지명" 언급
7.13	- 국방부, 사드배치 부지 공식발표	

자료 : 각종 언론보도 참조.

나. 경제적 이슈 : 對中 의존도 심화에 따른 피해 우려 확대

① 상품 교역

○ 우리의 對中 수출의존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의 對中 수출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제재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對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한국의 對中 수출의존도는 25%를 넘어선 반면,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의존도는 4.5%에 그침
- 또, 우리나라 전체 중간재 수출 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 2015년 기준 30.5%에 달함

- 특히, 주요 품목의 對中 수출의존도의 지속 확대로 무역제재가 우려되나, 중국의 對 한국 중간재 수요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직접회로의 對中 수출의존도는 40%를 상회하고 있고, 액정디바이스의 對中 수출의존도는 77%에 달함
- 화장품의 對中 수출의존도도 40%를 가까이 기록, 2000년보다 크게 상승

< 한국의 對中 수출의존도 >

(단위 : 비중%)

구 분	'00	'02	'04	'06	'08	'10	'12	'14	'15	'16	
韓 → 中	10.7	14.6	19.6	21.4	21.7	25.0	24.5	25.4	26.0	25.1	
(中→韓)	(4.5)	(4.8)	(4.7)	(4.6)	(5.2)	(4.4)	(4.3)	(4.3)	(4.4)	(4.5)	
중간재	15.2	20.6	28.2	29.6	28.8	30.3	28.1	29.5	30.5	-	
주 요 품 목 별	전자직접회로	2.0	4.9	13.2	22.3	24.8	33.0	33.4	42.9	46.6	40.2
	액정디바이스	0.0	33.3	67.7	33.1	45.5	60.1	72.0	65.5	71.2	77.0
	화장품 등	30.8	24.5	34.6	27.1	26.5	40.8	22.5	31.2	40.6	38.2
	유·무선 전화기	11.1	11.1	5.2	5.0	17.4	16.5	16.4	21.0	20.9	14.4

자료 : KITA, UN Comtrade 자료로 HRI 재구성.

주 1) 중간재는 BEC코드 분류기준으로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을 포함함.

2) 주요품목은 HS코드 분류기준을 따름.

3) 2016년 한국의 對中 총수출에서 전자직접회로(HS 8542), 액정디바이스(HS 9013), 화장품(HS 33), 유·무선 전화기(HS 8517) 등 4가지 품목의 비중은 31%임.

② 투자

○ 최근 對中 직접투자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드배치로 중국의 인한 對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영업 제재가 확대될 경우, 對中 투자 위축 및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

- 對中 직접투자 증가율이 2016년 소폭 회복

- 對中 직접투자 규모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30억 달러 안팎 수준이 지속
- 對中 직접투자 증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다 2016년 11.6%로 소폭 회복

- 하지만, 최근 對中 해외직접투자 비중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중국정부의 對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 시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질 전망

-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중국 비중은 2016년 현재, 9.4%로 미국 36.9%의 약 1/4 수준으로 축소
- 한편 동시점 중국의 총 외국인직접투자 중 한국 비중은 약 4% 수준으로 중국의 전체 외국인투자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임)
- 이에 따라, 중국입장에서는 파급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 >

(단위 : 억 달러, 비중 %)

구 분	'00	'02	'04	'06	'08	'10	'12	'14	'15	'16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54	41	66	119	241	247	287	279	304	350
	중국 (14.3)	11 (27.3)	25 (37.3)	35 (29.5)	39 (16.1)	37 (14.8)	40 (14.1)	32 (11.4)	30 (9.7)	33 (9.4)
	미국 (28.1)	6 (15.1)	14 (21.5)	19 (15.9)	51 (21.2)	34 (14.0)	57 (19.9)	58 (20.7)	68 (22.4)	129 (36.9)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407	527	606	727	1,083	1,147	1,211	1,285	1,356	1,260
한국(%)	3.7	5.2	10.3	5.4	2.9	2.3	2.5	3.1	3.0	3.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1) 투자금액 기준.

2) 2016년은 잠정치 기준.

1) 2016년 기준, 국가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홍콩 64.7%, 싱가포르 4.8%, 한국 3.8%, 일본 2.5%, 미국 1.9%, 대만 1.6% 순으로 나타남.

③ 관광

○ 중국의 對 한국 관광 제한이 심화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여행수지 개선 양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의 對中 서비스 수지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됨
 -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수지는 2016년 기준 176억 달러 적자를 기록
 - 한편, 중국에 대한 서비스교역 수지 흑자는 2010년 이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현재 58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우리의 對中 서비스 수지 흑자는 대부분 여행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對 한국 관광제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의 전체 여행수지는 적자이지만, 對中 여행수지는 2015년 기준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2016년 기준,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전체 여행객수는 1,724만 명에 달함
 - 그 중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46.8%인 807만 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
 - 한편 訪中 관광객 2015년 현재 약 444만 명으로 홍콩·마카오·대만을 제외하고 약 전체 訪中 외국인의 17% 수준

< 한국의 對中 서비스수지 및 訪韓 중국인 여행객수 >

(단위 : 억 달러, 백만 명, 비중%)

구 분	'00	'02	'04	'06	'08	'10	'12	'14	'15	'16
전체 서비스수지				-132	-65	-142	-52	-37	-149	-176
對 중국	-7	-5	4	-12	15	9	12	79	58	-
전체 여행수지				-131	-93	-84	-72	-54	-101	-94
對 중국	-7	-10	-10	-17	-7	-4	12	72	69	-
訪韓 여행객수	5.3	5.3	5.8	6.2	6.9	8.8	11.1	14.2	13.2	17.2
중국인	0.4 (8.3)	0.5 (10.1)	0.6 (10.8)	0.9 (14.6)	1.2 (16.9)	1.9 (21.3)	2.8 (25.5)	6.1 (43.1)	6.0 (45.2)	8.1 (46.8)

자료 :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는 전체 방한 여행객 중 중국인 비중.

【참고 2】 중국의 사드 관련 대응 및 보복 의심사례

날짜	사드관련 일정	중국의 경제보복 의심사례
2014년	6월 : 주한미군사령관, 美국방부에 사드 배치 요청	
2015년	3월 : 청와대, 사드 관련 요청·협의·결정 없음(3No) 10월 : 美록히드마틴, 한미 사드배치 논의	
2016년	1월 : - 북한, 4차 핵실험 - 박근혜 대통령, 안보·국익 위해 사드배치 검토 3월 : 한미,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및 공식 출범 6월 : 한국 국방부, ‘한미 사드배치, 올해 결론’ 발표 7월 : - 8일, 한미 사드배치 결정 공식발표 - 9일, 북한, 동해서 SLBM 1발 발사, 공중폭발 추정 - 13일, 사드배치 부지 성주군 공식 발표	7월 : - AIB 한국측 인사 직급을 부총재직에서 국장급으로 강등 - 칭다오-대구 교류행사(치맥 축제) 중단 8월 : 한류 제한령(금한령) 구두 지시 의혹 9월 : -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 한국인 대상 비즈니스 비자 발급 절차 강화 10월 : - 한국행 단체관광객 20% 감축 지시 -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 착수 11월 : - 중국내 롯데 세무조사, 안전점검 실시 - 한류 제한령 확대 시사 -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 - 중국 흡수핀에서의 한국 제품 편성 축소 - 한국산 화학품 반덤핑 조사 착수 12월 : -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최종 결론 - 한국행 전세기 1~2월 운항 불허 조치
2017년	2월 : 국방부, 롯데측과 성주골프장 군용지 교환계약 체결	1월 : - 한국 아티스트(조수미, 백건우 등) 중국 공연 일방 취소 - 인천·제주·부산행 크루즈선 운항 축소 2월 : 중국내 롯데 제품 불매운동 확산 3월 : - 한국행 단체관광 제한 조치 - 중국내 롯데마트 23곳 영업정지 조치

자료 : 한·중 정부부처 및 내외신 자료로 HRI 정리.

다. 종합평가

- 사드배치에 따른 주요국간 정치·외교적 공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미·중 간 협력 여부에 따라, 중국의 對 한국 경제적 보복 양상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
 - 정치·외교적으로는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북·중·러와 한·미·일간 신냉전 양상이 나타남
 - 이에 따라, 우리에게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되고 있음
 - 무역측면에서는 화장품 등 일부 대중 수출품목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투자측면에서는 對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영업제재 조치 강도도 확대
 - 특히, 중국정부의 對 한국 관광제재 강화로 국내 관광산업 피해 확산이 우려
 - 다만, 향후 미·중 간 협력 여부에 따라 중국의 對 한국 경제보복 조치 기조가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
 - 향후 시진핑 주석의 訪美가 예상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외교 및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기대됨²⁾
 - 이에 따라, 중국의 對 한국 경제 보복 양상도 전환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사드배치에 문제 해소 여부에 따른 향후 전망 >

주요국	전망	
	부정적(사드배치 마찰 지속시)	긍정적(사드배치 마찰 해소시)
정치·외교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간 협력에 따른 사태 전환으로 한중 관계 회복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 제재 품목 전방위적 확대 ● 투자 : 중국내 인프라 사업 입찰 자격 제한 및 국내기업 영업 제한 ● 관광 : 요우커 급감에 따른 관광산업 피해 확산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 비관세장벽 강화는 지속 ● 투자 : 일대일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회 확대 기대 ● 관광 : 국내 유입 요우커 재 확대 기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2) 4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 전인 3월 17일부터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이 예정된 만큼, 향후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간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3. 시사점

□ 한반도 사드배치결정과 그에 따르는 정치·외교·군사적 불안과 경제적 보복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첫째,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외교 교섭력 강화를 통해 현재 및 미래의 국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정책 방향성 정립 및 일관성 있는 추진

- 북핵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정책 방향이 정립되지 않아 정책 일관성이 없다면 안보 환경 변화 때마다 국익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조속히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고한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정책이 대외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는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해 외교 상 신뢰감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둘째,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신뢰 회복 노력을 통해 주변국과의 상호 호혜적이고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 역내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외교적 신뢰 회복 노력을 통한 주변국과의 상호 호혜적이고 동반자적 협력 관계 강화

- 우리나라의 안보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한편, 향후 시진핑 주석의 訪美 시기에 맞춰 對中 협상 전략을 강구하여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 최소화 모색 노력도 필요

- 동북아 역내에서의 한국의 입지 강화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변국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확대·강화하면서 지역 내 조정자(mediator) 역할을 수행
- 셋째,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 다변화, 자본 및 경영의 현지화, 기술과 자원의 자주화 등을 포함한 대외 경쟁전략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함
- ‘차이나+1’전략, ‘post china’전략 구상 등을 통한 수출 시장의 다변화는 물론 대외 서플라이체인의 분산이 필요
 - 중국 현지에 이미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한 우리기업들은 생산된 제품을 유럽, 중동 등 제2의 국가로 수출하여 판로를 모색하는 이른바 ‘차이나+1’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생산기지 및 수출 타겟 시장을 베트남(FTA발효, 2015년), 인도(CEPA 발효, 2010년), 말레이시아 등 포스트 차이나 국가들로 적극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
- 특히, 투자 및 생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망 지역 또는 국가들과의 서플라이체인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과 경영의 현지화 노력을 통해 경제외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또,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비한 對中 품목별 주력 수출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
 - 우리의 對中 주력 수출품목인 전자부품, 반도체 등은 중국 현지 진출 우리 기업뿐 아니라, 중국 로컬 기업의 수요도 높은 상황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對中 중간재 수출 감소가 고스란히 중국 측의 피해와 연결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 다만, 향후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따른 부품 자급률이 높아지면 對中 중간재 수출 감소가 우려되므로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도 병행 필요

동북아연구실